

## 환경분야 국가기술자격 신설

생물분류기사·자연환경관리기술사등

내년 하반기부터 생태계 현황조사 및 복원 등 생태계 관리업무, 생물종 분류 등을 담당하는 자에게도 국가기술자격증이 주어진다.

정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국가기술자격종목 15개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을 지난 11월 12일 공포했다.

신설되는 자격종목은 생태계 현황조사를 통한 분석, 예측, 평가를 통해 생태환경정화와 복원계획을 수립하는 등 생태계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연환경관리기술사·자연생태복원기사·산업기사, 생물상 및 생물다양성조사·평가, 생물분류 관련교육 등 생물분류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생물분류기사, 토양환경조사 등을 통해 토양환경오염의 정화 및 복구계획을 수립, 설계, 시공 및 공정을 관리하는 토양환경기술사·기사 등이다.

또, 홈페이지 제작, 기획, 설계 등을 담당하는 웹디자인 기능사와 화훼품질관리, 행사 및 건물장식, 화훼장식물의 계획, 제작, 유지 등을 담당하는 화훼장식기능사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신설된 15개 종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게 되며, 기술사 1개 종목을 제외하고는 필기시험과목은 각 종목별 3~5과목이며, 필기시험합격자에 한해 실기시험을 응시할 수 있다. 이들

신설 국가기술자격 15종목에 대한 검정은 내년 하반기부터 실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시험과목은 향후 공포되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포함될 예정이다.

자격증 취득을 준비하는 사람은 정확한 장소 및 일정을 향후 노동부 홈페이지나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www.hrdkorea.or.kr)에서 확인하면 된다.

## 환경부 내년 예산안 1조4천600억원

환경부 내년 예산안이 1조4천575억원으로 올해보다 3.8% 증가했다.

환경부는 최근 내년도 환경부 소관 세출예산 정부안이 2003년 예산 1조4천36억원보다 3.8% 늘어난 1조4천575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발표했다.

이 같은 환경부 예산 증가율은 내년도 정부예산안 평균증가율 2.1%를 크게 상회할 뿐 아니라 올해 추경예산 220억원을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5.5% 증가한 셈이다.

분야별로는 대기보전분야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대책 추진 등으로 올해보다 무려 27.5% 증가한 1천92억원이 책정됐고 다음이 자연보전 1천63억원(16.3% 증가), 환경정책 및 기술개발 2천70억원(14.2% 증가), 수질보전 및 하수도관리 3천726억원(10.7% 증가) 순이었다.

이에 반해 용자예산 등으로 지난해

집행이 부진했던 상수도관리분야와 폐기물관리 분야는 각각 2천58억원과 2천856억원으로 15.4%, 7.4%씩 감소했다.

환경부는 또 전체예산의 40%에 해당하는 5천785억원을 물관리분야에 집중,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과 도서지역 식수원 개발사업 등에 지원할 계획이다.

##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집중 단속키로

환경부는, 동절기에 강추위 등으로 단속이 느슨해진 틈을 이용하여 사업장 내에서 폐기물을 난방용으로 불법 소각하거나 합성수지 등을 노천소각하는 행위가 빈번해질 것으로 보고 강력 단속에 나섰다.

환경부에서는 이번 단속을 위하여 "03.11.1~"04.3.31까지를 동절기 불법소각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시·도가 주관하여 시·군·구, 검찰청, 지방환경청 등 유관기관 및 시민단체, 명예환경감시원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단속반을 구성·운영토록하고, 시·군·구는 읍·면·동 단위 또는 취약지역별로 2인 1조이상의 단속반을 편성·운영토록 지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단속과 함께 악취·매연을 발생시키는 불법소각 행위 방지를 위한 현수막 설치, 반상회 자료배포 등 대국민 홍보도 강화토록 하고 불법소각행위를 신고한 주민에게는 최

고 100만원까지의 신고포상금을 지급 하도록 했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폐기물의 불법 소각행위와 고무, 피혁 등 악취발생물질의 노천소각 행위를 중점 단속토록 하였으며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7조제5호(악취발생물질의 소각금지)를 적용하여 고발(200만원 이하의 벌금)조치하는 등 강력 처벌토록 했다.

### 환경관리 부실기업 금융기관 대출 불이익

앞으로 환경관리를 부실하게 하는 기업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때 불이익을 받게 된다.

환경부는 기업의 환경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국민은행 등 금융기관과 함께 금융기관들이 여신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내용들을 담은 환경가이드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지난 10월 31일 밝혔다.

환경가이드는 금융기관들이 대출 등 여신관리에서 고려해야 할 기업의 환경위험요소와 이 위험요소들을 관리할 수 있는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게 된다.

환경부는 금융기관과 기업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실무팀 회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환경가이드 개발에 곧바로 착수, 내년 상반기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실무팀 회의에서는 또 국내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환경성 평가 절차와 도입방안 등이 논의된다.

이번 환경가이드 개발에는 현대자동차 울산공장, (주)한화 대전공장, 볼보건설기계코리아(주), 삼성전자 DS총괄, 대한항공 등 5개 기업도 함께 참여하며, 환경전문업체인 (주)에코프론티어가 환경부의 용역을 받아 자문을 하게 된다.

### 폐형광등 분리수거 전국 확대

환경부, 내년 1월부터 실시

내년 1월부터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가 폐형광등 수거·운반에 책임을 지는 '폐형광등 분리 배출제'가 시행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의 '폐형광등 분리배출 및 재활용활성화 계획'을 발표했다.

폐형광등 분리 배출제는 도시지역의 경우 지자체의 책임하에 내년 1월부터, 그 외 지역은 자치단체별 지역여건 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 EU, 화학물질 규제 대폭 강화

유럽연합(EU)은 건강과 환경보호를 위해 각종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안전 검사를 대폭 강화하고 유해 화학물질이 포함된 제품의 유통을 엄격히 규제할 방침이다.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10월 29일

승인한 "신 화학물질 관리 정책(REACH)" 최종안에서 제조업체와 수입업자들에 대해 신규 및 기존의 모든 화학물질의 등록과 안전성 평가, 그리고 특히 우려되는 화학물질의 용도별 인가신청 등을 의무화하도록 했다.

집행위는 오는 2006년에서 2007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으나 각국 정부와 산업계의 반발이 심해 앞으로 유럽 의회와 각료이사회 등에서 어느 정도 조정이 이뤄질지 주목된다.

최종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모든 제품에 포함된 3만여종의 화학물질이 안전 기준을 충족하는지 평가받게 되고 화학물질 제조업체들은 사용허가를 받기 전에 관련 검사를 통과해야 한다.

현재 시판되는 화학물질 전체의 약 10%만이 같은 검사 과정을 거치고 있지만 REACH가 본격 시행되면 더욱 까다로운 검사 절차를 통해 암을 유발하거나 유전자 변이를 촉발하는 유해 화학물질의 유통을 차단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검사를 통해 "우려 물질"이 포함됐다고 지적받더라도 제조업체의 제품 생산이 자동으로 금지되지 않고 다만 제조업체로 하여금 유통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집행위원회는 이 같은 규제로 산업계의 비용 부담이 향후 10수년간 23억~52억유로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면

서, 그러나 유럽 기업들의 경쟁력이 높아짐은 물론 EU 전체의 의료비를 향후 30년간 500억유로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독성물질 담당 올리버 노울즈는 "최종안은 '적절한 조치'가 무엇인지 명확히 밝히지 않고 있다"면서 관련 업계의 압력으로 더욱 약화될 것이 뻔하다고 지적했다.

## 산업계 배출권거래 사업 본격 추진

산업계가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줄이기 위해 배출권거래제 구축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전경련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는 지난 11월 6일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 거래 킵오프 미팅' 갖고 정부와 함께 지구온난화를 일으키는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를 효율적으로 줄이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자에게 일정량까지 배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 및 그 권리를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인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구축하는 사업을 본격 추진하기 시작했다.

전경련 지속가능발전기업협의회(KBCSD : the Korea Business Council for Sustainable Development, 회장 : 허동수 LG칼텍스정유(주) 회장)는 앞으로 도입될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가상 설정해 실제 상황처럼 배출권을 거래하도록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 모의거래' 킵오프 미팅을 에너지관리공

단과 함께 지난 11월 6일(목) 갖고, 배출권거래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단계에 들어갔으며, 모의거래는 내년 3월까지 2~3차례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에 실시되는 배출권 모의거래는, 기후변화협약이 발효될 경우 우리나라에 부과될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우리 실정에 맞는 배출권거래제를 도입하고 새로운 시스템에 기업들이 사전 적응하기 위한 것이다.

## TBT함유 방오도로 사용 금지

앞으로 국내 모든 선박은 유기주석 화합물(TBT)함유 방오도료를 사용할 수 없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11월 13일 "해양 생태계에 피해를 주는 것으로 밝혀진 TBT함유 방오도료의 사용을 외항선과 원양어선에 대해 예외적으로 인정했으나 이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TBT함유 방오도료는 선박에 바다생물이 달라붙는 것을 방지하는 방오능력이 탁월해 지난 70년대 이후 대부분의 선박에 이용됐으나, 독성으로 인한 해양오염 가능성으로 국제적으로 규제가 강화되는 추세다.

## 성남시 하수도요금 50% 인상

성남지역 하수도 요금이 내년 1월부터 평균 50% 인상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요금 현실화와 물 절약 등을 위해 하수도 요금을 평균 50% 인상을하기로 결정하고 하수도사용조례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가정용의 경우 20이하 사용량 기준이 통합되고 요금단가가 기존 t당 50~58원에서 80원으로 인상된다.

## 대전지역 환경기준 내년부터 한층 강화

내년부터 대기, 수질, 소음 등 대전지역 환경기준이 한층 강화된다.

대전시는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5일까지 입법예고한 대전시지역환경기준 변경안에 대해 조례규칙심의회 의 심의 및 시의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는 지난 98년 4월 설정한 지역환경기준이 환경보전을 위해 충족해 왔지만 친환경도시기능 조성 등 환경여건이 바뀌면서 이에 맞는 환경강화 설정이 요구되고 있기 때문이다.

변경안을 보면 대기분야의 경우 전체적인 대기환경 항목 등 기준을 강화하고 납항목을 벤젠으로 변경했다.

또 지역별로 개선지역과 보전지역으로 나눠 환경관리를 세분해 추진한다. 이에 따라 공단과 동구, 중구, 서구지역은 개선지역으로 정해 관리를 강화하고 나머지는 보전지역으로 대기로

염의 예방활동을 강화한다.

## 산업폐수 재활용 "기쁨두배"

울산시 온산하수처리장(장장 정경옥)은 인근 삼성정밀화학에서 나오는 산업폐수를 하수 처리과정에 활용해 연간 1억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거두고 있다고 최근 밝혔다. 온산 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폐수는 주로 공장폐수로 이를 처리하기 위해선 탄소원을 넣어야 한다.

폐수에 고농도의 질소 등이 포함되어 있어 미생물 분해를 도와주는 탄소원이 필요하다.

온산하수처리장은 삼성정밀화학 폐수에 고농도의 탄소원이 포함되어 있는 것에 착안, 지난해 6월부터 실험한 결과 미생물 증식에 좋은 영양원이 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처리해 바다로 내보내는 방류수 수질도 항목마다 모두 기준치 이하여서 아무 문제가 없다.

이에 따라 온산하수처리장은 하루 삼성정밀화학 산업폐수 100~150t을 탄소원으로 투입해 7만t의 하·폐수를 처리하고 있다. 온산하수처리장은 연간 탄소원 구입비용 등 1억여원을, 삼성정밀화학은 폐수 처리비용 2억여원을 아낄 수 있어 행정기관과 산업체 사이의 '윈-윈(Win-Win)' 사례로 꼽히고 있다.

탄소원으로 연간 8억원의 폐탄올을 사 쓰고 있는 부산 장림하수처리장에

서도 삼성정밀화학 폐수를 활용하기 위해 시설공사를 하고 있다.

## 시화공단 환경 24시간 지킴이

"비가 억수같이 퍼붓는 대낮인데, 하천에 빨간 물이 흐르는 겁니다. 그 물을 따라 방류구를 찾아갔죠." 이재창(54)씨를 비롯한 시화지구 민간환경감시단원들은 얼마 전 폐수를 무단 방류한 시화공단의 두 공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지난 5월에는 순찰 도중 한 공장에서 노란 연기가 나오는 것을 발견했다. 조금만 마셔도 눈·코·목 점막을 상하게 하는 염소가스였다. 이들의 조기 신고로 대형 사고는 막았지만, 공장 근로자 7명과 감시단원 세 명이 호흡곤란으로 8일간 병원 신세를 졌다.

"악취민원 제로(0)를 향해 뛰다".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주민들이 환경과 수꾼으로 팔을 걷어붙였다. 서해가 보이고, 길이 3.5km 인공 녹지대를 갖춘 아파트단지. 그러나 창문을 열면 매캐한 가스냄새가 코를 찌른다. 바닷가 공단에서 뿜어내는 악취가 해풍에 실려 오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환경감시단을 구성한 것이 1999년. 6개월마다 17명의 단원을 모집, 교대로 근무한다. 그동안 파수꾼을 거쳐간 주민은 모두 1백26명이다.

24시간 4교대 근무로 일당 2만원을

받는다. 한 달에 한 주는 오전 1시부터 일해야 한다. 모집 초기에는 5대 1의 경쟁률을 보이기도 했지만 일이 힘들어 도중하차하는 경우도 있다.

고참 파수꾼 천동열(64)씨는 "건축 폐기물을 함부로 태우는 걸 적발, 사진을 찍으려다 업주들에게 먹살 잡히고 카메라를 빼앗길 뻔한 일도 많다"고 말했다.

##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자 구속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1월 10일 무허가 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하며 불법 소각 행위 등을 한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박모(31·동두천시 동두천동)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4월부터 양주시 은현면에 무허가 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체인 S산업을 운영하며 빈 공터와 공장건물에 폐섬유와 폐의류 2천800여t을 차량 1대(30t)당 90만원씩 모두 8천400여만원의 처리비용을 받고 운반, 적치한 혐의다.

## 수질기준강화 지자체 마찰예상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환경기초시설의 수질기준 강화를 앞두고 낙동강 수계 지방자치단체들이 하수종말처리장 등 시설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난 11월 10일 낙동강환경청에 따르면 하수도법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

부터 하수종말처리장 방류수 수질기준이 BOD(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와 SS(부유물질)의 경우 20mg/에서 10mg/, T-N(총질소)은 60mg/에서 20mg/, T-P(총인)은 8mg/에서 2mg/로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 중인 거창군의 경우 현재 처리공법으로는 방류수 수질을 강화된 수질 기준치 이내로 정화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군은 고도처리시설 도입을 위한 설계를 용역중이지만 설계 용역 후 이들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3년 이상 공사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보여 방류수 수질기준을 놓고 환경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마찰이 예상되고 있다.

1일 처리용량 1만4000t 규모의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중인 거창군은 내년부터 98억9900만원의 예산을 들여 2006년 말까지 고도처리시설 설치 공사를 계획하는 한편 공사가 완료되기 전까지 강화된 수질기준에 맞추기 위해 분뇨 처리장의 처리조를 증설, 일정 규모의 분뇨를 하수종말처리장에 유입시켜 방류수 수질을 높이고 효과가 없으면 화학약품 처리 등 다각적인 방안을 계획하고 있지만 당분간 방류수 수질 문제로 단속기관과의 마찰이 심각해질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다.

낙동강환경청 관계자는 "현재 낙동강수계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환경

기초시설에 대한 개선 및 시설보강 없이는 강화된 방류수 수질 기준을 맞추기가 없다"며 "연찬회 등을 통해 수질 개선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고도처리시설이 조기에 도입될 수 있도록 최대한의 지원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 매립장 가스 에너지로 개발

악취를 풍기는 대구시 쓰레기 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가 에너지 자원으로 개발된다.

지난 11월 7일 대구시에 따르면 달성군 다사읍 방천리 방천위생 매립지의 매립가스 자원화사업에 순수 민간 자본 222억8천800만원을 투입, 내년 말까지 자원화시설을 완공해 본격 에너지를 생산키로 했다.

방천리 위생매립장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자원화하기 위해 대구도시가스(주) 등 6개회사 컨소시엄이 설립한(가칭)대구에너지주는 앞으로 20년간 매립가스를 자원화 하는 대신 대구시에 연간 7억5천800만원의 가스사용료를 지불하고 매립장에서 사용하는 전기를 무상 공급키로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실시협약을 대구시와 체결, 본격 개발에 나선다. 대구에너지는 내년 말까지 분당 130m<sup>3</sup>의 가스를 정제해 분당 115m<sup>3</sup>의 중질가스를 생산하고 1.5MW급 발전설비를 갖추어 2005년 1월부터 염색공단내 개별업체 보일러 연료로 공급할 계획이다.

## 울산 기업체, 자율환경관리협약 체결

울산지역 기업체들이 친환경산업도시 울산을 꿈꾸며 스스로 환경오염 저감목표를 설정했다.

울산시는 지난 11월 5일 의사당 대회의실에서 박맹우 울산시장과 ㈜풍산 온산공장(공장장 최한명) 등 48개 기업체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2단계 자율환경관리협약조인식을 가졌다.

이에 따라 48개 기업체들은 내년부터 2006년까지 대기분야 1천213억원, 수질분야 222억원, 폐기물분야 50억원, 기타 131억원 등 6개분야 92개 시설에 총 1천616억원을 투자, 환경오염을 저감하게 된다.

## 오수·분뇨등관련영업 합동지도점 점검결과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체의 32%가 위반

환경부는 금년 한해를 『오수·분뇨 등 관련 영업자에 대한 불법행위를 근절하는 해』로 삼아 환경부, 시·도, 환경감시대 및 민간단체로 합동점검반을 편성하여 2003.3월부터 9월까지 실시한 합동지도·점검결과를 발표하였다.

금년에 중점단속대상인 오수처리시설등 제조업체의 경우 단속업체 122개업체중 39개 업체가 적발됨으로써 약 32%에 이르는 위반율을 보이고 있

어 앞으로 동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을 더욱 강화해야 할 것으로 드러났다.

## \*전체 단속업체 3,564개 중 112개 업체 적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 122개, 판매상 1,027개, 설계시공업 1,129개, 정화조청소업 761개, 분뇨등 수집운반업 525개)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은 오수 또는 분뇨를 정화하는 시설을 제조하는 업체로서 전국에 75개 업체가 있는데 이들이 제조·판매시설들은 대부분 땅에 매설되므로 한번 불량품이 사용될 경우 제대로 정화처리되지 않은 오수 및 분뇨가 하천으로 방류됨으로써 오히려 수질오염을 악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지도·점검결과 주요 위반사례는 대호엔지니어링(주)의 경우『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제3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오수처리시설제조업자는 등록된 제품만을 제작하여야 하나, 등록하지 않은 제품 5개를 제작한 것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2월을 받은 적이 있고, (주)일신산업은 두께미달(두께11mm를 9mm로 제작하여 2mm미달)로 불량제품인 오수처리시설을 제작한 사실이 적발되어 영업정지 1월 행정처분을 받았다.

오수처리시설등설계시공업체인 현대환경은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서 기술자(기사)1인을 미확보한 상태에서 영업을 하다가 1차(5.21)에 적발되

어 영업정지 1월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제2차 점검시(7.11)에도 기술인력 미확보된 상태로 영업을 하다가 영업정지 3월을 행정처분을 받았다.

분뇨수집운반업체인 김해위생(주), 대하위생정화사는 김해시 관내 분뇨를 수거하면서 주민들로부터 종사원들이 수수료보다 요금을 초과하게 받은 사실이 적발되어 경고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 100만원씩을 각각 납부했다.

앞으로도 불량제품이 제작될 소지가 많은 오수처리시설등제조업과 등록기준미달과 준수사항 미이행으로 위반이 많은 분뇨등관련 영업에 대하여도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 시·환경기술인협회 오염배출업소 단속

광주시는 시·환경기술인연합회 2개반 10명으로 합동점검반을 편성 지, 난 11월 13일까지 광주시내 대기·수질·유독물 배출사업장 602개소 중 2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주요점검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오염배출시설 설치·운영여부,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행위, 시설물의 부식·마모 등으로 오염물질 누출여부, 환경오염물질 무단배출 및 방류여부 등이었다.

## 환경관리회계, 기업 생존 위해 필수

기업의 생산·경영활동에 있어 환경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과제로 인식되는 가운데 환경관리회계 관련, 국제회계가 국내에서 개최됐다.

산업자원부가 주최하고 국제연합 경제사회이사국(UNESCAP),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청정생산지원센터가 주관한 ▲제7차 환경관리회계 전문가회의 ▲제2차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아·태지역 전문가회의 ▲지속가능한 생산·소비 국제세미나가 지난 11월 3일부터 5일간 일정으로 열렸다.

산자부 김철두 차관과 UNESCAP 김학수 사무총장, 각국 환경전문가 등 세계 30여개국 약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에서 열린 회의에서는 선진국들의 환경관리회계 추진동향 및 사례 등이 소개됐다.

금번 제7차 환경관리회계 전문가회의는 산업계의 환경관리회계 도입 촉진을 위한 국제회의로 선진국(미국, 스위스, 스웨덴등) 환경회계 관련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매년 개최되는 정기회의다.

환경관리회계 전문가회의에 이어 11월 6일부터 개최된 "제2차 아·태지역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 전문가 회의"는 인도네시아에서 개최된 "제1차 전문가회의"에서 논의된 결과의 보고와

지속가능한 소비 및 생산 10개년 계획에 대한 각국별 추진동향을 점검하고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에 대한 기업, 정부, 사회 등의 역할 등을 토의했다.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에 관한 10개년 계획"은 20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세계정상들이 "지속가능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의 주요한 수단중의 하나가 "지속가능한 생산 및 소비(Sustainable Consumption & Production)"라고 인식을 같이하고 이의 시행을 위해 지역과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지원을 위해 추진되는 것.

### 금년 7~9월 중 환경오염 배출업소 단속결과 발표

26,067개소 단속, 위반업소 2,163건 적발(위반율 8.3%)

환경부는 2003년 3/4분기(7~9월)중에 전국 각시·군·구에서 대기 및 수질오염물질 배출업소 26,067개소를 단속하여 2,16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하였다고 밝혔다.

단속한 업소중 법을 위반한 업소의 비율은 8.3%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위반율 5.4%보다 크게 증가한 것이다.

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318건, 사용중지 387건, 폐쇄명령 260건, 개선명령 431건, 기타처분 723건 등 2,119건을 행정처분하고, 무허가 업소·비정상가동업소 등 위반정도가 중한 962개소에 대하여는 경찰 및 검

찰에 고발하였다.

주요적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배출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한 대주전자재료(주), 부산경남우유협동조합 등과 방지시설을 제대로 가동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한 (주)삼성연공업사, 동양제철화학(주) 등 모두 918개소를 조업정지, 사용중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고발조치하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오염물질을 배출하다 적발된 (주)대한제강, 신홍통상(주) 등 475개소에 대해서는 시설개선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했다.

시·도별 단속실적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단속대상 배출업소수 대비, 단속율이 높은 시·도는 전북(47.0%), 인천(39.7%), 충남(36.1%) 등의 순이며, 서울(16.3%), 부산(16.6%), 대전(18.5%) 등은 단속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속한 업소 중 법을 위반한 배출업소를 얼마나 많이 적발하였는지를 나타내는 위반율은 인천(14.8%), 경기(14.2%) 등의 순으로 높았으며, 전북(2.8%), 충남(3.2%), 강원(3.3%) 등은 위반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발건수는 모두 962건이었으며, 경기도(548건)와 인천광역시(173건)의 고발건수가 높게 나타났다.

### 한강 폐수방류 중소업체 대표 구속

서울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한명관 부장검사)는 지난 11월 13일 공장 폐수를 한강에 무단방류한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중소 장신구 제조업체 D사 대표 김모(38)씨를 구속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1999년 7월 2일부터 지난 10월 10일까지 서울 천호동 공장에 장신구 연마기 3대를 설치해 놓고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폐수 22.5t을 하수구용 맨홀을 통해 한강에 무단방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폐수위탁처리 비용을 아끼기 위해 카드늄 0.745ppm(배출허용기준 0.1ppm), 납 36.6ppm(배출허용기준 1ppm) 등 중금속이 함유된 독성 폐수를 몰래 흘려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 경남 농공단지 폐수처리장 3곳 개선명령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경남지역 농공단지내 폐수종말처리시설 3곳이 개선명령을 받았다.

낙동강유역환경청은 하수 및 폐수종말처리시설, 분뇨처리시설 등 58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3.4분기 지도점검을 실시, 사천 송포농공단지외 함안 군북농공단지, 함안 파수농공단지의 오폐수처리장 등 3곳의 폐수 처리시설에 대해 개선명령을 내렸다고 최근 밝혔다.

사천 송포와 함안 파수농공단지 폐수

처리장은 T-P(총인)가 8ppm인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각각 10.9, 24.4ppm으로 적발됐고, 함안 군북농공단지 폐수장은 BOD(생물학적산소요구량) 43.9ppm, COD(화학적산소요구량) 57.5ppm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했다.

낙동강환경청은 앞으로 농공단지에 입주한 폐수 배출업소에 대한 지도점검을 병행 실시하는 등 환경법령을 위

반하는 기초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 및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방침이다.

## 유독물질취급 사업장 단속

환경부는 검찰, 유역환경청,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포르말린 등 유독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해 지난 11월 30일까지 특별 단속을 실시했다.

특히 최근 서울지검과 한강유역환경청이 무너목의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유독물질인 포르말린을 사용하고 폐액을 한강수계에 불법배출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함에 따라 이번 단속에서는 이들 업소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졌다. ◀

## 토크상식

**자주 틀리는 사자성어:** ●절대절명 → 절체절명(絶體絶命): 어찌할 수 없는 곤궁한 경우 ●홀홀단신 → 혈혈단신(孑孓單身): 의지할 곳 없는 홀몸 ●야밤도주 → 야반도주(夜半逃走): 남의 눈을 피해 한밤중에 도망감 ●풍지박산 → 풍비박산(風飛雷散): 우박이 사방으로 날아 산산이 깨지고 흩어지는 모양 ●일사불란 → 일사불란(一絲不亂): 질서정연하여 조금도 흐트러지지 아니함

**근육피로:** 산에 올라갈 때보다는 내려올 때 오히려 다리에 무리가 간다. 호주 생체의학 기술센터의 연구에 의하면 근육섬유는 격하게 움직일 때보다 힘을 조절하는 제어기능을 할 때 더 쉽게 피로를 느낀다는 것. 제어기능을 할 때는 근육 섬유가 끊어질 수 있으며, 그렇게 해서 쓸모없어진 조직을 대체하는 동안 근육통이 생기게 된다.